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추진방향



趙 聖 鐵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슬로건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의 조성'이다. 그리고 그 하위 목표로는 첫째,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의 생활패턴을 정립하고, 둘째,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셋째,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아래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 등을 통한 경제·사회활동참여의 확대, 경로연금제도의 내실화, 각종 일거리제공사업, 치매·와상노인대책의 강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노인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등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정책이 위기상황에 대한 임기응변식의 해결에 급급했던 과거와는 달리 고령사회에 대비한 여러 가지의 지구책을 연구, 용역 및 정책개발을 통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실로 말로만 듣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노인이 친근한 환경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와 보호에 중점을 두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야말로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실천항목이라 것은 어느 누구도 반론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을 토대로 앞으

로 나아갈 방향과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연혁을 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7년에 가정봉사원과견사업 2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19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1993년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에는 '재가노인복지'라는 용어가 명시되게 되었다. 그리고 1997년 8월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및 교육기관이 생기게 되었으며, 현재는 242개소가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예산 제약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의 내실화를 기하기보다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대에만 치중한 점이 많았다. 그리고 재가노인의 수요에 따른 시설수의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이다.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태를 보면, 아직까지 광역시·도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또한 광역시·도 및 농·어촌 등과 같이 특수성이 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일률적인 규정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재가복지사업의 틀을 연구개발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재가복지시설 추계연구(2001년)의 결과에 제시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예산확보 및 정책반영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셋째, 서민·중산계층에 대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취약 노인계층, 즉, 소득수준이 낮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 또는 소외된 노인이 그 대상이었다. 현행 재가복지사업의 주요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노인이기 때문에 그 수급권자이 외의 중산·서민계층은 재가노

인복지사업을 이용함에 있어 정부지원이 부재하거나, 제도가 미비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중산·서민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통하여 제도를 체계화하

노인이 친근한 환경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와  
보호에 중점을 두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야말로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실천항목이다

여야 할 것이며, 또한 큰 부담없는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이용료를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시했던 몇 가지의 정책제언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시점에서 정부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고, 재정 투입의 확대에 대한 정책집행자들의 결단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정책수행을 모든 재가노인들은 원하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늙어가고 있으며,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